

22.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21년 4월 2일
- 제 안 자 : 김원규, 안경은, 박갑상, 김재우, 전경원, 윤기배, 김태원, 임태상, 강성환, 이진련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1년 4월 15일) :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원규 의원)

□ 제안이유

- 가.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의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도로명주소,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부 개정·시행(2021.6.9)됨에 따라 기존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나. 법령에서 위임된 주소정보에 대한 사용촉진, 홍보·교육을 통하여 시민생활 전반에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과 드론 배송,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나. 주소정보의 사용확대, 홍보·교육, 생활화 시책 추진,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광고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내지 안 제7조)

다.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위원의 임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안 제15조)

라. 주소정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 업무의 위임·위탁, 토지 등 출입증(증표, 발급대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진성)

□ 개정 취지

-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2020.12.8.)되어 시행(2021.6.9.) 예정에 있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소정보 :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시물주소

□ 주요 내용

○ 총괄 및 제1장 총칙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과 조례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음.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 제2장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제2장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 사용분야를 규정하고(안 제3조),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으며,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원 근거(안 제4조)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5조)

또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및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고, 비용의 징수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였음.
(안 제6조)

광고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등은 무료이며, 그 외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허가 수수료 규정을 준용토록 비용 규정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음.(안 제7조)

○ 제3장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등

제3장에서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위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 기능과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였음.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 제4장 기타사항 등

제4장에서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안 제16조)

또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둘 이상의 구·군에 걸쳐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의 부여·변경 신청 등에 대하여 구청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였고,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안 제17조)

*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 : 한국국토정보공사
- 「전자정부법」 제72조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부칙

조례 시행은 2021년 6월 9일로 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일과 일치시켰으며, 종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둬으로써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2006년에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도로명 주소의 부여 등에 있어 도로와 건물의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적 부여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도로와 건물이 없는 산악, 해안 등은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 위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 반면, 오늘날은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 지하로 넓어지고 도시 구조 및 건물이 입체화, 대형화되면서 입체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위치 찾기가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특히 평면화된 지금까지의 도로명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표기 지역 이외 장소에서의 활동이 증가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위치 표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주소정보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들의 물류이동과 위치 찾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주소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 하였으며,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2021.6.9.)을 위해 본 조례안도 법령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조례표준안을 준용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예고안에 따라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개정됨으로, 향후 시행령 예고안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법령에서 위임된 주소정보에 대한 대구시 및 구·군의 사용 촉진 홍보·교육,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조례 개정 취지는?	○ 2006년 도로명주소법 제정 이후 사회적 환경이 다양해지고 주소부여 대상이 늘어나면서 기존 평면적인 도로명주소 부여에서 육교, 전화부스, 자전거도로 등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다양화된 주소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었음.
○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안)이 변경될 경우 조례는 어떻게 되는지?	○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전 중앙부처간 협의가 된 것으로 변경개정은 희박하다고 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